

지금, 불평등 해소하는 착한 산업혁명 시대

# ‘창조·혁신’에 사회적 가치까지... 新기업인 어디 없나요

## 점프! 커넥팅

### 新기업가 정신 필요한 때

과도한 노동·소득 불평등 불만 외면  
지속 투자·복지정책 확대 강화해야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기업 비용을 줄이고 가치를 창출한다. 또 공유가치창출(CSV)을 실천하는 수천개의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 시대의 핵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 신(新)기업가정신이 주목받고 있다.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세기 전 전쟁과 가난에서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를 만든 요인 중 하나가 기업가정신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혁명과 인터넷 중심의 3차 산업혁명에서 고속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문제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불만을 외면해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경제·사회적 불만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올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진입 기준인 3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국민들의 경제생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7개 선진국(G7)이 1인당 GNI 3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의 임금, 근로여건, 분배 등을 현재의 우리나라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한국과 G7 국가 민생경제 지표 비교)

분야	지표항목	최근 한국 수치 (A)	1인당 GNI 3만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 (B)	비교	평가
임금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	5.8% (2016)	7.1%	81.7%	취약
	실질 평균임금	32,399\$ (2016)	39,992\$	81.0%	취약
근로여건	연간 근로시간	2,069시간 (2016)	1,713시간	120.8%	취약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10.1% (2014)	25.2%	15.1%p	취약
분배 및 사회복지	지니계수 개선율	11.4% (2014)	31.5%	20.1%p	취약
	상대적 빈곤율	14.4% (2014)	11.8%	-2.6%p	취약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10.4% (2014)	20.7%	10.3%p	취약
청년실업	청년실업률	9.8% (2016)	10.9%	1.1%p	양호
	청년 NEET 비율	18.0% (2013)	14.5%	-3.5%p	취약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	4.7p (2016)	8.5p	3.8p	양호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미국 구매력평가 (PPP)달러 기준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 실질 평균임금, 연간 근로시간에 대한 비교는 비율(A/B)로 나타냈으며 나머지 지표 항목에 대한 비교는 격차 (B-A)를 %와 p로 표시  
\*평가는 해당 지표에 대한 최근 한국의 수치가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에 비해 양호할 경우 ‘양호’, 취약할 경우 ‘취약’으로 표시했으며 격차에 대한 평가나 거시적 환경의 차이 등은 고려되지 않음.

(자료=OECD, IMF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라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의 경우 1달러 이상 낮았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5.8달러지만, G7 국가들은 3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7.1달러였다.  
우리나라의 실질구매력 기준 평균 임금은 3만2399달러로, G7 국가들이 3만 달러를 달성한 때의 평균 3만9992달러와 비교시 8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더 길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G7 국가 평균인 1713시간보다 20.8% 많았다.  
사회보장 역시 취약했다. 우리나라의 실

업급여 순소득 대체율은 지난 2014년 기준 10.1%지만, 비슷한 경제력을 보였을 때의 G7 국가들은 25.2%였다. 같은 기간 사회적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개선율도 우리나라는 11.4%지만, G7 국가 평균은 31.5%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 (14.4%)는 G7 국가 평균(11.8%)보다 2.6%p 열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계속해 외면하고 고속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미명 아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계속해 외면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견줄 수 없고, 이들에 발목이 잡혀 4차 산업혁명에 선두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마이클 포터 교수의 말처럼 단

순한 기업의 이윤이 아닌 경제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에 포함한 신기업가정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희경 카이스트 부총장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2·3차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성장과정을 거쳤다”며 “4차 산업혁명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착한 산업혁명, 즉 성장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기업의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투자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 보험사 ‘빚’으로 자본확충... 지난해 4배 늘어

### 13곳 3.5兆 후순위채·영구채권 발행

보험사들이 빚을 내 자본을 확충한 규모가 지난해 4배 넘게 증가했다.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에 대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3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13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3조51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을 발행했다. 후순위채와 영구채는 일정 규모까지 자본으로 인정된다.  
발행 규모는 지난 2016년 6650억원(후순위채 5210억원·신종자본증권 1440억원)의 약 5.3배에 달했다. 이보다 1년 전인 2015년에는 후순위채 2천630억원이 전부였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없었다.  
발행이 급증한 것은 자본·회계기준 강화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보험금)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K-ICS)도 시행된다.  
IFRS 17과 K-ICS는 보험부채를 과거보다 늘리는 만큼 자본도 확충해야 한다. 정확

(보험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이 및 계획)

연도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2015	2630	0	2630
2016	5210	1440	6650
2017	17750	17350	35100
2018	3600	36380	39980

  

구분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시기
메리츠화재	1000	0	4월
한화생명	0	10700	4월
KDB생명	0	2140	5월
신한생명	2000	0	6월
롯데손해보험	600	0	6월
교보생명	0	10700	7월
현대해상	0	7490	3분기
동양생명	0	5350	하반기

한 자본 확충 규모는 미정이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생사를 가를 정도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가리지 않고 보험사들이 앞다퉀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 저성장보험을 많이 팔았던 생명보험사 위주였던 것에 손해보험사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000억원, 5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농협생명은 후순위채로 5000억원을 조달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5850억원에

후순위채 1500억원을 더한 6000억원을 발행했다. 손보업계에서도 현대해상이 5000억원, DB손해보험이 4990억원의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크다. 이미 8개 생·손보사가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마쳤거나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액은 최대 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4월 메리츠화재가 후순위채 1000억원을 발행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5000억원에 이어 올 4월 신종자본증권 1조7000억원 을 또 찍었다. KDB생명은 지난달 2140억원

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후순위채도 연내 발행할 계획이다.  
신한생명은 이달 중 최대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해 11월 900억원에 이어 이번달에 600억원의 후순위채로 자본을 더 끌어모은다. 교보생명이 7월 중 최대 1조7000억원, 현대해상이 3분기 중 최대 7490억원, 동양생명이 하반기 중 535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후순위채든 신종자본증권이든 어디까지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는 ‘빚’이라는 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KDB생명이 올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금리가 7.14%에 달하는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을 웃도는 조달비용을 지불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발행이 늘수록 더 손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에서 발행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채무 방식의 자본 확충에 앞서 ‘현금 투입’을 대주주와 경영진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